

2023. 3. 9.

□ 토론회 개요

- 목적 : 지역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산림경영계획 제도 도입,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기후위기, 지역소멸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주제 : 시군 산림계획제도 개선 및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
- 일시/장소 : '23. 3. 9.(목), 14:00 ~ 16:40 /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 참석자 : 61명[[미래산림특위위원(10), 산림청 공무원(9), 지자체 공무원(15), 학계 및 연구 전문가(9), 기타 공공기관 등(1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 사무국(국장 외 7)]]

□ 주요 일정

- (개 회) 미래산림특위 정은조 위원장
- (축 사) 경상북도 의성군 김주수 군수,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최무열 회장
- (발제 1)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구자춘위원)
(발제 2) 시군 산림계획을 통한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이강오위원)
- (지정토론) 한국치산기술협회 최병암회장 외 9명(국립산림과학원 정병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병학, ESG코리아 임송택, 대구대학교 오세창, 산림청 전덕하, 강원도 임창용, 충청북도 우창희)
- (총평) 한국치산기술협회 최병암 회장
 - 시군 산림계획제도를 도입 여러가지 모델로 만들어가며, 지역임업인과 연계 참여, 여러가지 문제를 계획제도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함
 - 시군관리계획이라는 강력한 계획이 계획제도와 연동될 시 여러 다양한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음(시군단위 필드에서 움직이는 경제가치는 산림목재도 있지만 토지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나, 토지 전문가가 토론에 보이지 않음)

□ 토론회 결과(요약)

1. 정은조 위원장 개회사

-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산림특위는 임업의 사회 환경 경제적 균형을 보다 강화하는 이슈와 아젠다를 발굴하여 제도화하는데 노력할 것임
-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산림경영계획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

2. 김주수 의성군수 축사

- 현재 농어촌은 이상기후와 경제침체, 지역소멸이라는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산림자원의 경제적 활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계획제도의 기본 구조를 재구성하는 오늘 논의는 대안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낙후된 산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3. 최무열 임업인총연합회 축사

- 탄소중립 기여, 목재 자급률 제고, 임업 소득증진을 위해 시군단위 산림계획제도 논의는 중요함.
- 67%나 되는 사유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산림 서비스 산업과 환경의 가치 창출을 이끌어 내어 어업의 71%, 농업의 80% 주준인 임업인 소득을 증진시키고, 국가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함

4. 주제 발표

가) 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계획제도 개선(구자춘 위원)

- (배경) 이용규제와 낮은 수익성으로 사유림 67%가 경영의사없이 방치, NDC 감축 목표 산림부분 달성에 탄소흡수 기여 제고, 낮은 임가소득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 (기본방향) 지역별 차별화 되고 지역 내 통합적 산림경영 수행 필요, 광역지자체 지역 산림계획과 산주의 산림경영계획을 종으로 연계하고, 국유림 경영계획과 기초 지자체를 횡으로 연결할 필요. 계획수립에 집행력 확보를 위한 대책(인력, 예산 등)
- (개선과제) 기초 지자체 중심의 산림계획의 법제화(산림기본법), 시군구 계획수립과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원,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지역 내 목재 이용 의무화(목재법 16조)
- (기대효과) 경제, 환경, 사회 측면 다양한 기대효과(기후경제지역소멸 위기 극복 기여)

나) 시군산림계획을 통한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 (이강오 위원)

- 왜 지역임업, 지역산림경영인가 : 지속가능 산림경영시대(2030~)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 (2010~2020), 임업의 미래(백년숲 비전, 산림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임업활성화, 지역 탄소중립, 지역소멸위기 대응 등)
- 규모와 주체에 따른 지역임업, 지역산림경영 : 지역임업 및 지역산림경영의 정의 규정, 지역임업 분야별 규모화, 목재생산 기준 지역거점 육성(10개 권역), 민간 지자체 국가 등 지역 임업의 주체와 그 역할, 산림탄소경영과 산림복합경영(시·공간, 경영주체 협력)
- 지역산림계획의 실제 : 지역산림계획의 역할, 공간계획, 비전과 목표, 세부전략, 거버넌스 등 지역별 사례 소개
- 지역산림경영의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역사회 참여 증진, 지역 고유 브랜드 창출로 산림의 산업화(지자체 니즈 충족, 산주·임업인·원목생산업·산림 기술·산림조합·지자체·지역 주민 등 모두에게 이익)

5. 지정토론

< 최병암 좌장 >

- 해결 방안이 쉽게 나오지 않은 산림계획제도에 대한 토론임
 - 우리나라 사유림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사유림 뿐아니라 산지구분으로 인한 파편화, 온갖 규제로 얽힌 산림 구조에서 과연 선진국형 임업 경영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시군 산림계획이 제도적으로 빠져 있고, 지역단위의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통합형 계획 작동 필요
- 임업인과 전문가와 지역 산업과 또 여러지역 주민들을 묶어낼 수 있느냐? 그런 힘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국가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인가에 굉장히 어려운 난제임

< 국립산림과학원 정병헌 연구관 >

- 우리 산림기본법 기본이념(산림 보전과 이용의 조화/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해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방법 및 이행 체계 등 제시되지 않음
 - 산림이 국가 또는 임분 단위에서 지속경영 여부를 측정, 보고, 검증하는 이행체계 없음
 - 산림관리와 임업과 연계 산림구성(공익보호와 목재생산), 장기적 목재생산 목표와 연관성 다루어지지 못함
 - 국가, 광역지자체 전달 체계 미흡하고, 심의·논의, 계획평가·보고 체계가 부재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도 5년 계획 수립·시행, 지자체 별 흡수량 산정 정확성 제고하기 위해 지역산림 계획이 충실히 작성·측정·검증·보고 필요
- 일본은 2001 삼림·임업기본법 개정 강력한 산림계획제도 시행(20년 계획 5년마다 변경)
 - 산림과 목재생산량, 임도건설의 정량적 장기목표 제시 및 달성 정도 모니터링

○ 토론자 의견

① 산림계획제도의 개선 필요성

- 산림기본법 기본이념에 맞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및 모니터링이행 체계 마련
- 새로 기본이념 설정, 실효성 의문인 우리의 산림계획제도를 전면 개선한 것인지
- 산림과 임업의 관련성을 고려 산림기본법을 산림·임업기본법 체계로 개정 고려

② 효과성 제고

-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간 정합성과 이행력 높여려면 추진실적 평가, 예산의 차등지원 운영 등 규정 강화할 필요 있음
- 산림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격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 절차마련
- 산림기본법을 “산림·임업 기본법” 개정, 산림기본계획을 “산림·임업종합계획” 명칭 및 성격 규정 필요

< 최병암 좌장 >

- 산림기본계획제도 현 제도에 대해 분석 및 비판의견, 보고 평가 체계 부재에 대한 보강 방법 및 체계 마련, 시군 산림 계획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임을 제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부장 >

- 농촌공간 계획법 본회의 통과되고 본격적인 시행 준비예정이나,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준비작업이 더욱 필요할 것 같고, 공간계획과 관련해서도 사전 논의가 많이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농발계획이 2013년 시군 의무 수립하고 있으나(여러 계획들을 통합 수립) 성공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제도를 만들어 실제 이 계획을 뒷받침해 주는 실행력(실무 담당자 수립하나 달라지는 것 없이 고되기만 함)이 없다 평가 받는 계획이 되어 버림
 - 산림청에서도 산림계획이 잘 안착하기까지 충분한 준비와 시범계획으로 작은 사업으로라도 지자체 담당자들이 지금 계획을 해보는 절차적 과정 필요
 - 일본 시정촌 같은 경우 계획수립의 공간 계획 스케일 다름. 농식품부도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군단위 계획인데 시군 이하 단위의 공백을 인식하여 생활권, 시군의 하위 권역 등의 단위에 커뮤니티 계획의 필요성 인식
 - 공간단위와 함께 계획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상향식(중앙정부의 계층체계적 전달 선호방식) 및 하향식(산촌 지역 커뮤니티 단위 계획에서 시작해 상향식으로 종합해 가는 시군 계획 접근)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 부처 간 협업이라든지 협력의 요인도 찾아서 담아야 하며, 커뮤니티 계획에 이런 부분의 충족 가능성.
 - 농식품부 경우 관광계획제도화에 마을단위로 쪽 연결된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마을과 주거지역 인프라 정비, 일부농지 이런 거 빼놓고는 산지나 이런 거다 통합돼 있는 하나의 유기체적 통합된 체계인데 별개로 중앙관리영역으로 가다 보면 이제 커뮤니티 앱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적인 일들을 어렵게 됨. 그래서 마을이 됐던 커뮤니티 아니면 산촌 지역에서 숙박이라든지 마을 이런 것들을 연계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테스트하는 것 필요함

< 최병암 좌장 >

- 시범 계획으로 5개 시군의 수립해 본 경험도 있음. 이제 커뮤니티 단위로 할 거냐, 시군 전체 단위로 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려 필요할 것임

<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이상귀실장 >

- 임업직불제 도입 후 현장의 달라진 분위기는 조림 등에 관심을 보이는 산주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임. 이 정책토론 제안은 좀 당황스러움
- 이 산림계획제도 개선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의구심을 생긴다. 기후 위기,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지역 시군의 산림 계획이 없어서 못했던 것인가?
-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전면적으로 제기 하는 것인가? 과거에 광역 단위나 국가 단위의 산림계획이 뭔가 넓었기 때문에 문제 였던가? 느닷없이 이런 문제를 지금 시급하게 제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임업 현장의 문제들을 얼마나 많은데 회의적인 생각이 듦
- 지금 임업 현장에서는 실상은 이러한 상황임.
 - 지역분권은 임업계 산림 분야에서는 지역 분권은 시기상조임.(임업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 산림조합, 설계 및 감리자)
 - 우리나라와 일본 비교는 일본처럼 산주가 직접경영 포기하여 산림조합의 대리경영 운영한 것임, 산주 위주로 경영을 하던 정책이 우리는 우선되었던 점 고려
 - 지역적으로 새롭게 된 계획에 맞춰 산주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
 - 산림경영주의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받고 싶은나 받을 곳이 없다, 농업기술지도와 같은 그런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며, 산림경영모델도 제시해 달라(신임 과학원장 요구)
 - 국산목재 수요처가 없다면 산림경영 및 임업발전을 있을 수 없고, 산림경영은 산림조합에서 전문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산림계획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의 연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가져갈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하다 생각되나, 현 계획제도의 전면적인 다른 방향에서의 검토는 숙고해야 함

< 최병암 좌장 >

- 지역 산림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분권으로 연결돼서 현재 어떻게 보면 좋은 체계를 오히려 더 안 좋게 변형될 수 있고, 경영 주체로 산주를 세우는 정책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병학부장 >

- 임업직불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산림경영계획작성 보조금 축소로 지금의 경영 계획 수립비율 53%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임 따라서 예산확보 필요함
- 산림경영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수립자체가 어렵다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 제시해 달라
- 현 산림기본계획이 산림특성,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고 않고 있고, 2050탄소중립 등 국가정책이 오히려 임업경쟁력을 약화하거나 벌채가 어려워 목재지급률을 낮추는 실정임
-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림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 필요하며,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산주의 수익 창출하는 계획 제도가 수립되어야 함

< 최병암 좌장 >

- 부재 산주가 많은 우리 산림 구조에서 그 지역의 경영계획 수립 지원이 우선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군 산림 계획 제도가 들어오면 좀 더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함

< ESG코리아 임송택사무총장 >

-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찾는 과정에서 환경과 농업과학 임업에 공통점은 가치와 가격의 괴리. 가치와 가격의 괴리로 가치는 대단히 높는데 비경제적 가치 기대 가치는 높음
 - 비경제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바꿔줘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게 환경, 경제학의 기본적인 과제인데 말이 쉽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여 여러분과 또 발제자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산림계획제도는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산림과학원에서 공익적 기능(2014년 126조 이는 임업분야 총생산액의 60배수준) 126조에 5조원이 탄소관련이고, 나머지는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가치 등 임
 - 산림경영은 철학의 가치 충돌로 환경과 임업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함
 - 하나의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20년 전에 고성 산불에 대한 복원모델로

자연 복원 모델과 인공 조림 모델이 동시에 시범사업 개념 추진하고, 결론적으로
일장일단이 있다는 중간결론 도달

- 산림경영도 산림·탄소경영 모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재 아주 명확한 경영 모델도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그래서 우리가 열어놓고 실제 다양한 산림경영 변형 모델들을 공동·시범 사업 개념으로 준비해 나가는 어떨까요.

< 최병암 좌장 >

- 근본적인 가치 문제로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며, 우리가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소는 정말 극히 일부인데 많은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시장 가치화해서 산주들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을 다시 일으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거는 영원히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됨

< 대구대학교 오세창교수 >

- 목재이용 의무화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토론의견을 제시하면, 지역 내 목재 이용에 있어서 실수요자에 맞춤공급 문제는 지역 내 목재 지침 규정 없이 추진은 어렵고, 일정한 공급량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임
- 목재법에 목재공급과 수급이 포함되고 산림계획제도와 연계되어 목재공급 보장이 되면서(목재법 6조, 10조, 13조, 35조), 생산 인프라 확충 중요 및 목재수·공급을 매칭하는 관리 가능한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뒷받침 해 줘야함
- 공공 건축의 범위 안에 학교를 포함, 목조화 목질화 등 필요
- 산림계획제도의 목재이용분야 지역산림경영위원회에는 목재이용지역 협의체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일본의 경우 건축물 목재이용촉진협정)
- 규모가 안 되면 몇 개 시도를 같이 묶어서 대규모의 클러스터 조성 운영하거나, 국가가 직접 규모있는 클러스터 사업을 1개로 집중 육성한다면 목재 이용은 저절로 체계화 가능.
- 제대로 된 나무만 생산할 수 있는 정도면 숲 경제는 굉장히 잘 될 것이고, 산림의 공적 기능도 발휘할 수 있게 됨

< 최병암 좌장 >

- 시군산림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계획이 지역에서 나오는 목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그 지역에서 유통할 것인가, 목재법의 실행에 부정합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심

<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전덕하 >

- 윤석열 정부의 산림청 국정과제는 임업인 소득 안정,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같은 것이 저희 국정 과제로 추진, 산림 르네상스 시대 선언하고, 돈이 되는 경제 임업, 사회 임업, 환경 임업 추진.

- 규제 완화 과제를 많이 발굴하고, 법, 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등을 계속 진행
- 필요성은 공감, 2017년 인제군 산림 계획을 시작을 해서 2019년부터 예산을 4억원을 확보, 매년 5개 시군 수립, 가이드라인도 개발하고 시범 사업중임
- 약 5년이 된 시점에 농특위에서 법제화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 산림청도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나 산림률도 다르고 산림이 없는 시도 있음. 그래서 이거를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 산림의 소유 구조에 있어 산주 219만 명(1인당 1.9ha) 경영면적이 소규모와 부재 산주가 55% 절반이며, 이런 상태로는 산림경영이 어려운 구조임
 - 산지 은행, 분할매수형 사유인 매수 등 규모화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가 29개 지자체에서 시군 산림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법정 계획 수립 대상이 굉장히 많음 법정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현재도 어려운 상황임
- 시도 법정계획 조차도 현재 세워지지 않은 계획들이 많은데, 시군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게 실행력이 있겠느냐 그 전에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범적으로 한 거를 좀 살펴보고, 지자체 계획이 정원, 휴양, 복지단지 등에 편중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계획 및 지역인재 양성 부분도 반영한 개선 필요

< 최병암 좌장 >

- 시군 단위에서의 정책적인 어떤 역량, 실천력, 시군 단위 인력 구조, 지방 공무원들의 어려운 여건, 인구 과소 지역에 산림률이 많은데 중앙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산림청 정책논의 대상임

< 강원도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

-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행정 지역에 기반한 시군산림계획수립은 바람직하다 생각되며 그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경영기반인 임도시설이나 일정구역을 가지고 사업 실행을 하게 되는 유역관리사업과 같은 경우는 현재하고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 강원도는 국유림의 74% 이상이 벌기령이 넘은 노령목으로 순환 경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길로 산림계획 수립이라 생각됨
- 현재 행정 수요에 있어 목재생산의 기본적 생산과 함께 숲의 생산(산채 등)부분을 고려해야만 새로 도입하는 시군산림계획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목재와 비목재 분야를 함께 고려한 확실한 경영모델 없이는 시군산림계획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임

< 최병암 좌장 >

- 지역 주민 그다음에 지역 산주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이 되는 그런 계획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가장 바튼업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동안 우리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톱다운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현실적 괴리 극복 필요

< 정원산림과장 우창희 >

- 괴산은 군 종합계획에 시군이 하고 싶은 사업 위주로 계획이 수립되어 산림관리 및 경영 부분은 미수립 실정이었으나, 괴산군은 2019년 산림계획을 편성해서 3개 권역(생태, 복지, 임농복합경영)으로 구분 산림 사업, 산림탄소경영, 선도산림경영단지, 산림경영 규모화 포함 괴산군 산림계획 수립함
- 조례는 제정하지 못하였으나, 산림경영주체 거버넌스인 괴산 산림경영센터 구성하여 선진 산림경영 실현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 산림경영 문제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산주 등의 관심도가 낮다는 것이며, 별기령 문제는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며, 지역단위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될 필요 있음

< 최병암 좌장 >

- 괴산군은 가장 모범적으로 군단위 산림계획 세워 전략적 활동하는 현실적 제안에 감사

< 원예디자인학과 전정일교수 >

- 임업 소비자 관점에서 의견이 필요하다, 현재 수요자는 산림을 휴양, 나는 자연인이 다에 열광하는 것 같으며, 전통적 임업의 수준을 넘는 소비자와 소유자를 구분하고, 수요자의 고려되어야 함
- 공익부분에서 최대 수요자 소비자는 정부임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돈을 지불할 의사(민간 산주의 정원, 관공등의 유도를 억제하고 공익적 수요를 강조한다면 국가도 비용지출 확대 필요)가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함
- 산림의 소비자는 어디에 있는가 도시에 존재, 따라서 수요자의 유형을 임업 전체에 반영하고 임업영역 예외로 보는 정원, 휴양복지 등을 임업영역에 포함

< 최병암 좌장 >

- 요즘 정원 관광 등 주요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잖아, 소비자 고려 매우 중요함, 괴산군 선도적으로 임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정됨(과 명칭에 정원포함)

< 구자춘 위원 답변 >

- 시군산림 계획이 규제가 아니라 시군에 기회로 쓸 수 있도록 포지셔닝 되어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제도는 위로 아래로 계획이 합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 고려
- 농업이나 타 분야랑 결합할 수 있는 부분 등 오늘 토론 부분에 있어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답변해야 할 것이 많으나, 나중에 보고서 완성할 때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잘 보완 하겠음

< 이강오 위원 답변 >

- 산림경영 주체에 관한 의견은 산림계획은 산림경영주체로 지역임업인들이 공무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
- 시급성 문제 제기는 하나의 변화가 생기려면 10년 20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얘기하면 초기 5년 정도 해보고, 또 조정 등 새로운 전략을 짜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듯
- 전정일교수님의 비용부문은 이번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으며, 국가는 탄소, 지자체는 경관, 임업인은 소득을 유형구분 큰 틀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산림경영모델은 과학원 등에서 풀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며, 계속 하나의 모델제시로 해결될 문제로 보지 않음. 이게 지방대학이 각 지역 특성에 맞게끔 계속 지역 연구를 해서 지역 산림의 전략적 모델들을 만들고 실현을 해보고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나오는 케이스로는 절대 발전이 없을 것 같음
 - 과학원, 산림청, 지방대학의 역할 등에 대해서 작년에 괴산에서, 올해는 3개 시군의 컨설팅 하려고 함

< 최병암 좌장 총평 >

- 지금 시군 산림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 모델도 만들어가고 지역 임업인과의 연계 참여 여러가지 문제를 계획제도라는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 중앙에서 만든 산림기본계획에도 시군관리계획이라는 강력한 계획도 있어서 이 계획 과 산림계획이 연동되어 운영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담보될 수 있음(시군단위 필드에서 움직이는 경제가치는 산림목재도 있지만 토지문제가 굉장히 큼) 산지토지분야 전문가가 안 보이는 것 같음.
- 그래서 오늘 좋은 토론을 해 주신 발제를 해주신 분 뿐만 아니라 좋은 토론을 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발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은조위원장 마무리 말씀 >

- 오늘 아무튼 이렇게 각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참석하신 내빈 및 우리미래특위위원님 특별한 감사드립니다.
- 미래 산림특별위원회가 올해 새로운 과제를 발굴에 있어 소비자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임업인의소득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쪽으로 의제를 잡아가려 합니다
- 3.28일 정식 임명장 받고 새로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산림청이 그동안 했던 어떤 틀 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혁신하고 규제를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농특위에 의견 주십시오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